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다시 보기



youtu.be/G8JayXvS_UI



유튜브(youtube.com)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검색 후 시청 가능

목차

006	인사말
008	지 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010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012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014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016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018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020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022	[세션 01] ‘한국사 시수 감축’이라고요?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024	[발제] 역사과 교육과정과 한국 현대사 서술 방향 박건형 대전만년고등학교 교사
030	[토론] 한국 현대사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강화정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38	[토론] 두 현실의 충돌 속 근현대사교육 방향 잡기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042	[세션 02]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요? 교과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044	[발제]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조왕호 전 대일고 교사,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분석 및 서술방향 연구진
061	[토론] 최중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065	[토론] 배성호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개요

주 제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 제 2021년 12월 14일(화) 14:00~16:30
장 소 여성미래센터 소통홀(B1), 온라인 생중계
주 최 국회의원 강득구 | 국회의원 강민정 | 국회의원 도종환 |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윤영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전국역사교사모임
후 원 5·18기념재단 |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제주4·3평화재단

일 정

구분	내용
사회	윤세병 공주대학교 교수, 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세션 01	‘한국사 시수 감축’이라고요?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4:20 ~	[발제] 박건형 대전만년고등학교 교사
15:20	[토론] 강화정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세션 02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요? 교과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5:30 ~	[발제] 조왕호 전 대일고등학교 교사,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분석 및 서술방향 연구진
16:30	[토론] 최중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배성호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인사말

지 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래훈 |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강득구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 국회의원(열린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윤영덕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인사말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10월 말에서 11월 말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 이수 시간을 대폭 감축한다는 안을 내놓았다가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업회는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제주4·3평화재단 등과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시수가 필연적으로 근현대사의 역사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업회는 또한 올해 초등 교과서가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초·중·고 교과서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다루면서 ‘6·29선언’을 ‘6·29민주화선언’으로 표기해 왔던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표기에 대한 변경과 함께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교육용 출판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부의 편수용어가 애초에 ‘6·29 민주화 선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수용어에 대한 진지한 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업회는 이러한 편수용어 검토 뿐만 아니라 기존 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기술 내용 또한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 역사가 정확한 용어와 그에 따른 올바른 내용들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우주의 완벽한 변화법칙은 인과응보입니다. 성주괴공(成住壞空)의 되풀이입니다. 우리의 만사가 다 인연이 있듯이 지구촌 역사의 윤회법칙성은 과학적이고 빈틈없이 진행됩니다.

역사, 즉 과거를 배우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세대가 민주시민으로 행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역사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찰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의 기획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장을 열어주신 강득구, 강민정, 도중환, 박찬대, 윤영덕 의원님, 그리고 전국 역사교사의 공동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을 대표하고 계신 박래훈 회장님께도 든든한 마음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맡은 순천별량중학교 교사 박래훈입니다.

먼저 ‘역사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도 역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박찬대, 윤영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발 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시수 감축안을 계획하였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 시수 감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이 과정에서 오늘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각 지역 과거사 기념·계승 단체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사 시수 감축안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역사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지향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역사는 살아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현대사 교육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사 교육을 비롯한 우리 역사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14일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박래훈**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대사 교육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그리고 국회 강민정·도종환·박찬대·윤영덕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기념재단, 노근리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등 후원해주신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억과 기록을 가진 단체들에게도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최근 교육부가 주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이수단위를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문제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고, 한국사 교육은 이 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현대사의 흐름, 동아시아사라는 안목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다행히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또 다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역사관과 시대정신을 갖추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위한 한국사 교육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일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한국사 시수 감축과 한국사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시수 감축 논란을 포함하여, 2017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이후 한국사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편수용어를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현안들이 의미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 **강득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을 위한 소중한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만드는데 애써 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해주신 박찬대, 강득구, 도종환, 윤영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박건형, 조왕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사회와 토론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역사교육 특히 자국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삶을 영위해 나갈 곳의 역사적 형성을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역사교육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위한 암기 교육’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맞닿아있는 ‘살아 숨 쉬는 역사교육’이 되지 못한 채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처럼 “죽은 뼈다귀의 이름”만 외우는 교육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현대사 교육은 더욱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재적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또 적절히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적이지 않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논쟁적인 역사적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오롯이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역사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을 위해 바꾸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사 교육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사교육을 위한 각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얼마 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하기도 한 교과서(편수자료) 내용 및 발행체제 개선도 시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분들께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나누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분들 그리고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분들이 발제나 토론 등으로 참여해 주셔서 특히 기대가 큼니다. 역사 교사이기도 했던 저 역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눠주신 이야기들 귀담아 듣고 또 국회의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시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 **강민정**

인사말

<한국사 교육 현안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 마련에 함께해주신 강득구·강민정·박찬대·윤영덕 의원님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10월,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사 과목 시수 감축이 논의되며 역사 교육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사 과목 축소는 현대사 교육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전국 역사교사 중심의 반대 성명이 이어졌고, 다행히 관련 논의는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자리는 찾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한국사 교육에 대해, 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꽃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억압 속에서 당당히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중심에는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따뜻한 봄날 가족을 잃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던진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그 참된 가치를 오래도록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사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의 서술방향도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정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오로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 간절함은 국정교과서 폐기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한 사람, 한 사람의 숭고한 삶과 뜨거웠던 민주화운동의 참된 진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 큰 결실을 맺고, 우리 역사는 한 걸음 더 진일보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가 그 발걸음의 일환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며, 여러분 모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따뜻하게 보내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 **도종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인천 연수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더 나은 역사교육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고 준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으로 이루어진 87년 직선제 개헌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잃어버린 국민주권을 되찾아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87년 체제를 이끌어낸 힘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을 탄핵시켰고, 이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교육부의 일부 편수용어의 문제점은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우리 국민과 민주화세력이 목숨걸고 이뤄낸 87년 체제의 의미를 왜곡하고 주체마저 뒤바꿔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제라도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의미 있는 현대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 **박찬대**

인사말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으신 공주대학교 윤세병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 및 토론을 준비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신 백암 박은식 선생도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신(神)이며, 나라는 형(形)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다면 망한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며, 나아가 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5·18 전국화교육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학교 선생님들이 광주에 와서 5·18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자율적으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아선 안 될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시 배우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제주 4·3 항쟁, 대구 2·28학생민주의거, 마산 3·15의거와 부마항쟁까지, 지역의 역사가 지역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역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여 모두의 역사와 기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모두가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지혜로운 방안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잊히지 않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 **윤영덕**

세션 01

'한국사 시수 감축' 이라고요?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발제] 역사과 교육과정과 한국 현대사 서술 방향

박건형 | 대전만년고등학교 교사

[토론] 한국 현대사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강화정 |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두 현실의 충돌 속 근현대사교육 방향 잡기

신주백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역사과 교육과정과 한국 현대사 서술 방향

박건형

대전만년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우려

지난 10월 22일 교육부가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사 시수가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6단위에서 5학점(단위)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현장의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여러 언론에서 주목하였다.¹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가장 주된 비판점은 시수가 줄어들면 후반부 단원에서 배울 한국 현대사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11월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한국사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역사교육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암기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현행대로) 6학점으로 유지하되 다양한 탐구와 체험을 통해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² 뒤늦게나마 시수 감축 계획이 철회되어 한국현대사 교육이 파행될 위기를 피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다양한 탐구와 체험을 통해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라는 교육부 장관의 말은 한국 교육계 수장으로서 과연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온다. 지금도 현장의 수많은 역사교사들은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스스로 탐구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역사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연구·실천 공동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

1 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6687.html

2 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633.html

력과 활동들을 ‘암기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라 매도하는 것은 역사 교사들의 사기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발언이다.

현장에 있다 보면 교육부 장관의 평가와는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발언을 학생들에게서 듣게 된다. 보통 전국 역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역사 수업은 재미있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일 것이다. 역사 수업은 교과 특성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기 쉽게 인과관계로 묶어서 구조화시켜 설명하는 방식에도 용이하기에 이해하기 쉽다고 느낄 수 있다.³ 거기에다 다양한 사료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 방식을 재미있게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학생들은 깊은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평가의 영역으로 가면 완전 다른 문제가 펼쳐진다. 현재 한국사 수능은 절대평가이고 쉬운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변별력을 지녀야 하기에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후 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다. 대학 측에서는 고등학교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시험은 대체로 어렵고, ‘객관적으로 점수 판별이 가능’하게 출제될 것이다. 실제 현재 다수 학교의 한국사 시험들을 살펴보면, ‘역사의식이나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역사적 사실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문제’보다는, ‘객관적 점수 변별이 가능하고 시험 관련 민원 소지가 적은 사실 관계 위주의 문제’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서 선택형 문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서술형 문항이라 하더라도 ‘단답식의 연속형’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다. 이는 역사 공부에 대한 과중한 학업부담 이미지를 유발한다.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엔 한국사를 배우고 난 뒤, 2~3학년에서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선택하기를 주저한다. 아무리 자신들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도 결국 역사 수업이고 개념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른 과목들-특히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보다 공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입시 유불리’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역사를 선택하는 극소수의 학생들은 ‘역사 마니아’들이 유일하다. 실제로 이런 매커니즘은 학교 현장에서 역사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한국사 수업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계사나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아가

3 이런 내러티브, 일반화·도식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한다. 하지만 이는 이 글의 논의 범위가 아니기에 제외하도록 하겠다.

는데 '입시와 평가'라는 제도가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즉 역사교사들이 역사 수업 개선하는 노력을 해도 평가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큰 한국 사회에서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역사교육의 문제를 현장 역사교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현상 진단이고 그럴 경우 해결책도 요원하다. 평가의 문제는 오히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니, 어찌보면 이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사 교육과정만 본다면 이미 시수 감축이 철회되었기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가 지금처럼 수능 필수 과목이 되고,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수능필수화'라는 쌍두마차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였을 때, 이 위상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역사과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라면, 현재도 고사 직전이라는 문과계열 과목과 역사과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리라 기대되진 않는다. 입시 유불리, 취업 유불리에서 이른바 '상식'을 담당하는 과목들은 그다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확장되어 온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과연 교육적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말 그대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최대 확장판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관점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을까?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비판적 시각으로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직시하고, 자발적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시민사회의 유자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따라, 즉 입시·취업 유불리에 이런 민주시민의 자질이 과연 길러질 것인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문학 과목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대개의 인문계 교과는 보편적 문해와 교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들어온다면 각 교과에게 '선택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상황'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이 입시에서 선호할 수 있는 과목 만들기'가 경쟁적으로 이뤄져, 보편적 문해와 교양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인기에 영합하는 과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매우 기형적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현장교사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따라서 공통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선택형은 최소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교육과정 내용을 더욱 가볍게 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입시·취업에 연연하지 않는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

이다. 평가가 단지 사람의 두뇌를 천편일률적으로 재는 것대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피드백으로서 기능한다면 학생들이 '수업도 재미있고 평가도 흥미로운 역사 수업'이라 말하지 않을까?

교과서 속 한국 현대사 서술에 대한 단상

한국사 시수 감축이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단순히 시수를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의 현대사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민할 지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사 구성 방식은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중이 중학교 『역사』가 대략 7:3, 고등학교 『한국사』가 대략 3:7이라 볼 수 있다. 중학교는 전근대를 위주로, 고등학교는 근현대를 위주로 학습하게끔 조직되어 있기에 이 글의 분석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 골격은 예전의 것과 유사하지만, 그 대신 고등학교 근현대사 영역은 분량상 상세한 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가 자세히 설명되고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래 글을 통해 제안하도록 하겠다.

1. '형식적 민주주의' 역사만 부각되는 구조

교과서 서술의 기본 구조를 자체가 헌법의 제·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건들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현재 교과서 서술이 헌법 중심의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쫓아가는 구조다 보니 '민주주의 확대'를 선언적·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짚어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완성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에도, 헌법을 과정으로 서술되다 보니, 1987년 직선제 개헌이 마치 역사의 최종점이자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의 종언을 고해야 하는 급으로 구조화 되어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찰과 실천 등이 끊임없이 요구되는데 불구하고 지금의 교과서 서술은 87년을 정점으로 하는 영웅화(낭만화)가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화석화시키는 위험성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생명력을 잃고 영웅화·화석화된 민주화운동 서사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현재의 것이 되지 못하고 피상적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삶과 유리된 민주화 서사가 현실 정치의 반민주적 흐름과 만나 학생들에게 '어떠한 세력'에 의한 역사교육의

일방적 주입으로 잘못 읽혀질 때, 언제든지 학생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역편향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학생들마다 다르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생각들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한 교실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의 대립·갈등, 동조·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며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특히 현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논쟁을 시킬 수 있는 수업이 구성되도록 교과서의 서술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논쟁은 논쟁으로 두고, 이를 드러내면서 교실에서 충분히 수업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말이다.

2. 민주화운동 주체의 문제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서술은 '87년 승리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30~40년 전 이야기를 현재 자신들의 삶과 가깝게 느끼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당대 독재에 맞선 사람들의 정의로움과 희생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학생들에게 '승리 서사'는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지지 강요나 우월성 부여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에 민감함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드러내고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 국면들마다 각기 다른 주체들과 다채로운 항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단지 '국민'으로 한정하거나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호명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자체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감이 적잖이 존재한다. 현재 각지에서 개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국민 중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투쟁하였고, 이 반대편에는 또 국민 중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4·19에 대해 교과서에서 학생들의 투쟁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고학생, 노동자,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주체와 운동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화운동 서술의 다양성 확보

해방 이후 대한민국사와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들은 주로 '정치·제도·남성·서울' 중심의 서사 구조이다. 그렇기에 '경제·문화·여성·지역'의 움직임과 다양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노동 운동 및 노동 환경의 개선도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서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빛과 그림자에서만 다뤄진다. 교과서 서술에 따른다면 정상 국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를 벗어난 한국 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이 있는 듯한 인

상을 준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정상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고, 자본주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노동의 문제가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세력화를 이끌어내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싸워나가면서 민주주의도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세계사적 과정 아니겠는가? 일례로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을 살펴보자. 교과서의 서술은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따로 떨어뜨림으로써 개별적 사건으로 접근한다. 민주주의와 노동자대투쟁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87년 이후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과 과정 자체가 상당히 축약·왜곡되는 느낌이다. 87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노동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고, 지금도 논쟁적인 주제이다. 전술하였듯이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적으로 다가가게끔 서술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이 각자가 드러나도록 수업을 진행하게 도와주면 될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서울 중심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서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남성에 갇히지 않은 운동 주체들의 모습과 영역을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 자체가 '소수 운동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확장 과정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일상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제시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가령 87년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와 함께 요구한 것이 두발 자유화인데, 특전사·해병대 출신 경비원들이 '바리깡'을 들고 정문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 두발 검사하지 말라는 요구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민주화 과정이라는 것이 거대 정당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 다양하게 깊숙이 침투해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운동사나 투쟁사의 시각뿐만 아니라 현대의 생활사나 일상사로 보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일상사나 생활사가 단순히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 주는 측면이 있기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배제·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현재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를 지탱하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틀로 현대사를 이해할 것인지도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생태 환경의 시각에서 현대사를 성찰할 지점은 없는지, 학생들의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에 담아낼 여지는 없는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매우 많다.

한국 현대사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강화정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1

우선 긴급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연구소에서 파견 근무 중인 현직 역사교사입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 과정에서 역사교사로서 가졌던 위기감과 불쾌감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해주신 박건형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역사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역사과목의 선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는 역사교사,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학생들과 만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사 수업시수 하나에 수많은 역사교육자들(초중고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들)이 예민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역사 교육과정 특히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박건형 선생님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하기에 질문을 하기 보다는 <한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의 과목으로 한정될 수 없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 폭력, 전쟁의 경험을 가진 인류가 이를 해결하고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가꿔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와 역사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 과정에서 소개된 UN의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역사교과서)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는 역사가 집단기억을 만들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으로 기능하며 그런 까닭에 더욱 비판적

이고 다원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럽평의회에서 작성한 『유럽의 역사와 역사교육에 관한 유럽평의회 권고안(1996)』, 『21세기 양질의 역사교육-원칙과 지침(2018)』와 같은 국제문서는 역사교육이 민주주의 문화와 시민교육에 기여한다는 분명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역사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고 숙고해갑니다. 정반대로 역사가 어떻게 오용되고 왜곡되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도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교육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학교 속 역사교육을 바라보아야 더 확장된 논의가 가능하다 생각하기에 다소 장황하게 서두를 열었습니다.

2. 역사는 오늘날 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데 **개인 사이 혹은 유럽의 민족들 사이의 폭넓은 이해, 관용과 신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분열, 폭력 그리고 불관용을 위한 힘을 제공할 수도 있다.**

3. **역사의식은 중요한 시민적 자질이며 그것이 없으면 개인은 정치적 혹은 다른 조작에 보다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학교에서 역사학습은) **역사지식이 얼마나 비판정신, 민주적이고 관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적 자질을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되는지 안내 받아야 한다.**

- 『유럽의 역사와 역사교육에 관한 유럽평의회 권고안(1996)』 중에서

역사교육은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문화, 사회적 도전에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가 더욱 더 다원화하면서 일어나는 이질, 난민과 이주자 문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격 문제 등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

역사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민주주의 문화 역량의 획득을 촉진하므로 학교의 역사교육이 시민교육과 만나는 것은 자명하다. **역사교육은 민주주의 문화역량(CDC : Competences for Democratic Culture)을 적용한 접근법, 즉 어린 학생들이 민주주의 문화에 관하여, 민주주의 문화를 통하여, 민주주의 문화를 위하여 경험하고 배울 역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교실 풍토의 조성**이 가능하다.

『21세기 양질의 역사교육-원칙과 지침(2018)』

표1 유럽평의회 역사교육 관련 권고안 및 원칙(일부)

02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는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져 고시되었습니다.(2018.7.고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명명되지만 국정교과서를 전제로 만들어진 2015 개정교육과정(2015.9.고시)과는 다른 내용 체계를 가집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근현대사의 비중이 큼니다. 그리고 1987년 이후를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한 것

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¹

중학교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 중심으로 계열성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 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 보입니다.² 역사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세 번 반복해 배우는 것에서 벗어났고, 역사학습의 대상 시기가 줄어든 만큼 배워야 할 역사 지식의 양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개선점이 많았지만 이번 교육과정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사』 교육 과정이 '서사 구조'를 규정하는 틀이 된다는 인식 아래에서 현대사 교육과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사』는 '분단-전쟁-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중심 서사로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하나의 새로운 시기로 구성된(하나의 대단원으로 구성) 1987년 이후 시기를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2015.09)	→	2015 개정교육과정 (2018.07)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경제 성장의 성과 및 과제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의 변화 내용을 설명한다.	→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

표2 1987년 이후 서사 구조를 규정하는 큰 틀

1 현대사 안에서 1960년만을 하나의 분기로 삼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는 이후 60여년(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사회 변화와 역사문제를 담기에 벅찼다. 새로운 분기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2018년 개정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며 새로운 분기점이 정립되었다.

2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역사교사가 현재의 중고 역사 과목의 계열성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1%였다. 박병기 외,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p.187.

1987년 이후 시기를 새롭게 설정했지만 이 시기는 기존 서사에서 일부 분기되어 나왔을 뿐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서사 속에 존재합니다.³ '민주주의 발전(민주화 성취)과 경제성장(외환 위기 극복)'의 서사 구조는 시대적 과제의 성취와 극복을 강조하는 탓에 국가 중심의 승리 서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정치와 경제·사회·문화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연관성을 살피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외환위기로 당면한 사회적 갈등과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지금의 서사 구조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정치사 중심으로 사회·문화 영역의 서술을 왜소화시킬 위험도 큼니다. 이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의미와 관계성을 포착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같은 발전 서사가 현대사를 이해하는 강고한 틀로 작동해 학생이 자신의 시선에서 자기 삶의 문제로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여지를 축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분절적 인식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 담론에서 생명의 문제가 무시되고 노동문제를 타자화 시킵니다. 『한국사』 교과서 속의 노동은 여전히 '노동운동'의 일부로만 서술됩니다. 90년대 이후 경제적 민주화가 활발해졌지만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민주화의 의제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경제성장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발전 중심의 서사 구조 속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여성,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호명되지 못하고 주변화됩니다.⁴ 이런 서사 속에서 학생들은 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발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3 현재 역사 교과서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구도는 침묵을 강요받던 기억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공식 기억으로 인정되면서 교과서에 수록된 결과라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혹은 시련과 발전)'이란 표현은 4차 교육과정의 1982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당시 민주주의는 민족중흥을 대체한 개념으로 '제5공화국 수립이 민주주의 발전의 전기'라는 식의 정치적 선전을 위한 단어였다. 그러다 6공화국 시기에 발간한 1990년 이후 국정교과서에서 반공주의가 다소 약화되며 독재와 민주화라는 역사 인식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다. 민주화 운동 서술은 사회 민주화에 힘입어 교과서에 서서히 자리 잡았다. 보수정권의 후원 아래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이 교과서에 반영되던 시기, 민주화 운동을 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구도는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4 역사교육에서 이 같은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가 있다. 2014년 역사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중고등 학생의 역사인식 조사 결과, 중등학교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응답자 대부분이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 노동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많은 수가 유보적 태도를 취하며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대답을 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민주주의와 노동인권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의 삶, 특히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지원, 『중·고등학생의 현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전국 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의 '역사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130, 2014, pp.65-71.

03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현대사 영역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토론회 주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이 답입니다.

시민으로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삶과 앎을 위한 현대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때 현대사는 학생이 살아가는 동시대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살펴본 1987년 이후 한국사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 살아가는 '현재'를 포함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시민으로 태어났고 시민으로 자라납니다. 이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가꾸는 일에 역사교육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역사를 배우면서 그 쓸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 만족이나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토대로서 역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중 현대사가 가지는 쓸모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학생들은 동시대사로서 현대사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재미와는 구별됩니다. 관심과 흥미는 교과로 들어오기 위한 심리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흥미를 통해 교과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학생이 만나는 동시대사·현대사는 고정적 역사 지식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피면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역사인식을 상대화함으로써 성찰의 기회를 더 넓힙니다. 또, 최근 강조되고 기억, 기억정치, 기억 투쟁은 과거가 현재 재현되는 양상에 집중하며 학생의 역사인식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이 자신이 선 자리, 그 기반이 되는 '현대세계'의 사회 구조와 체제를 조망하고 연원을 따지면서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비판적 인식 키웁니다. 학생들이 현대사에 느끼는 익숙함 혹은 가까움은 시간의 문제 뿐 아니라 관계성의 측면에서도 강조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입말과 경험으로 동시대사에 다가가면서 보통의 사람들 그들의 살아있는 삶으로 역사에 접근해갑니다. 최근 역사교육에서 지역현대사와 구술사 실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학생(시민)의 성찰'입니다.

04

그렇다면 학생이 자기 삶과 '현재'의 문제 속에서 역사를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어떤 틀과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서, '국가 중심의 발전주의 서사'를 뚫고 나와 행위자들의 다양한 선택에 집중하고 역사 속 논쟁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역사학습이 가능해야 학생 개인이 현재 자기 삶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국사, 국가사의 단일서사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만들어진 서사와 서사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을 역사학습의 전부로 보는 일부의 인식은 무척 우려스러

운 상황입니다. 서사를 구성하는 틀로서 '한국사'라는 과목은 한계가 큼니다. 현대사 특히 학생들이 살아가는 현대세계는 실시간으로 초국적 자본과 정보가 오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일국사의 단일 서사가 담지 못하는 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역사교육계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당시 중등학교 『역사』 과목을 구상했습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시선을 함께 담으려 노력한 결과 탄생한 과목이었으나 보수정권의 파행적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사라졌고 고등학교 역사는 『한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의 복원이 절실히 보입니다. 2007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 1,2에서 자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기본적 학습을 전제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신설된 『역사종합』의 경우 인식상의 한계가 적지 않지만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근현대사 과목으로 통합 방식과 논리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경계 밖에서 혹은 안팎을 넘나드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한국사' 교육 긴급 현안 토론회가 아니라 '역사' 교육 긴급 현안 토론회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사를 넘어 서려는 역사교육계의 노력과 열망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목의 틀을 바꾸어도 여전히 '발전'을 대신할 서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겪으며 근대 문명을 회의하려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생태나 지속발전가능교육, 포스트휴머니즘 담론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과 성장을 회의하고 성찰하는 시선은 역사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됩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 발전 서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발전 서사의 주체로서 ①국가 혹은 민족 서사에 대한 비판과 ②발전이 그리는 단일한 서사로서 승리 서사의 비판 -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거꾸로 발전 서사가 가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때 발전 서사는 다양한 행위 주체와 다른 선택 가능성, 그 속에서 불거질 다양한 논쟁,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대안 서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모색하다 보면, 현대사가 걸어온 여정 속에서 전쟁과 독재의 경험, 분단과 냉전 체제의 유산은 여전히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기에 이를 성찰하는 논리로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숙고하게 됩니다. 이는 1987년 이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역사에서 평화의 문제는 한국전쟁을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면서 구성됩니다. 민주화는 민간인 학살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진상 규명이 이뤄지며 집단기억의 일부로 이를 기념하고 의례화되는 과정으로 논의됩니다.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제노사이드와 학살의 문제를 살피면서 이 극단의 상황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한 학생들이 다양한 행위 주체의 선택 앞에서 숙고하는 과정이 역사과에서 평화에 접근해갈 수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

의를 서사 구성의 원리로서 삼으면 이를 둘러싼 수많은 역사적 논란을 드러내고 행위 주체 간 역사 인식의 차이에 집중할 때 학생(시민)을 중심에 둔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5

마지막으로, 논의의 초점을 민주화운동에 맞추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현대사 교육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4·19-5·18-6월항쟁의 사건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성취'되었다는 서술은 무척 곤란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완성형일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이들의 논의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현장의 역사 교사들은 학생과 만남 속에서 '역사부정'의 역사인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탈진실(post-truth)이 시민과 학생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현장 역사교사들의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5·18 역사부정 자체를 현대사 수업의 주제로 삼고 학생들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어떤 논리로 역사부정을 일삼는지 학생들 스스로 차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시기별로 5·18 망언이라 불릴만한 발언들을 소개하고 하나의 사료를 보듯 그 맥락과 논지를 파악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자신에게 5·18 수업은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한번도 5·18을 왜 배워야 하는지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0여년 전, 초임 교사로 만났던 학생들은 '탱크, 군인, 피, 전쟁'과 같은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그림들로 5·18을 기억하였으나, 근래에는 '택시운전사, 주먹밥, 시민군, 헌혈' 등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5·18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매번 "희생하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억합니다" 같은 기념의 언어로 5·18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할 뿐입니다. 이 장면에서 교사는 생각합니다. '왜 5·18을 배워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 스스로도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처럼 이 질문은 극우성향의 5·18 부정론자들이 독점하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교육은 결국 사실을 알고 답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산출하는데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5·18을 둘러싼 현재의 기억, 혐오 발화, 증오 행동, 차별 등 학생 스스로 자신이 처한 현실, 현재의 인식에서 5·18을 향해 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질문은 다양하며 논쟁적일 것입니다.⁵

3 김명주,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친다는 것, 한겨레 신문 8월 17일자 기사, 2021.12.12. 검색
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8031.html#csidx7da39eea7aad7b4be03b4f57caddbbad

올해 봄 5·18을 기억하며 현재 미안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진 역사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업은 '연대'의 마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역사교사는 특강에서 만난 재한미안마 청년연대 활동가를 학교로 안내합니다. 이미 학생들은 미안마의 역사를 공부했을 뿐 아니라 연대의 마음이 SNS를 통해 현지 미안마인들에게 전해져 큰 울림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의 미안마인들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공유했던 학생들에게 활동가가 말하는 미안마는 더는 멀고 낯선 동남아의 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초등교사는 아주 천천히 미안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안마 국가의 이름을 가리고 그곳 아이들의 사진을 교실 한켠에 붙여놓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린이들일까요? 현재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라는 질문도 함께 써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사는 '미안마'의 어린이임을 밝히며 이들에게 궁금한 것을 써달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미안마 어린이와 그들이 처한 상황, 역사적 현재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 사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현실, 현재의 문제를 의제화하며 역사에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이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환해옵니다. 교사가 예민한 촉수로 학생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을 면밀히 보며 역사적으로 탐구할 주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교사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총론 체제 동시에 교사의 교실 수업을 지원하고 수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일이 요청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생태환경의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혹은 더 숙고해야 할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기후위기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때 새롭게 요구되는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생태환경의 문제의식을 담은 생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현재의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민주주의를 다르게 성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은 시민 학생이 현재 자기 삶의 문제를 살피고 고민하며 과거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일,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두 현실의 충돌 속 현대사 역사교육 방향잡기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우려

두 분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학교현장에 계신 발표자분들이 한국현대사교육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지점, 그리고 딜레마를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최근 일어난 사태가 큰 계기였습니다.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자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차하는 두 현실이 엄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탐구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와 취업이란 또 다른 압박현실은 느낌보다는 암기를 우선 요구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구체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두 현실은 교육자치가 강조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엄존해 온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역사교육현장은 두 현실이 공존하며 30여 년 동안 갈등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현실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적응하고 조금씩 개선해 가는 교과서와 보조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과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결합한 '역사'를 표방했지만 '역사'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역사'를 교재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닙니다.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제별 접근을 적극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과정에 따라 반복되는 듯한 느낌의 역사 교과서를 말한지 제가 들어도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시험 삼아 개발해 보면 어떨까요? 한 적이 있나요? 시험 교재로까지 사용한 경험이 우리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학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구성과 비슷한 역사교과서 개발은 명확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3:7을 유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편집구성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대신에 역사과 선택과목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결국은 세계사, 동아시아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통한 또 하나의 교재를 만들겠다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한 선택입니다. 학생들로부터 더 외면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력이 거기까지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사, 미국사, (중)남미대륙사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지구사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협력해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 조금만 노력한다면, 앞서 제가 언급한 과목들의 교재를 3-4개씩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된 성과들을 놓고 비교 연구를 하며 교육과정을 만들고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한국현대사, 더 나아가 150여 년의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기본 역사 논리를 해명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큰 담론이기도 하니, 던지기식으로 짧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01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핵심 발전논리는 문명화 - 근대화 - 세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요?

02 우리 근현대사에서 독립-민주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우리는 아직 이를 연결 짓고 있지 못합니다. 광복과 독립국가 수립으로 통치고 있을 뿐입니다.

03 박건형 발표자의 발표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1987년 6·10민주화운동까지와 이후 민주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을 잘 드러내면 앞으로의 지향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고, 수업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전자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등도 함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여기에 '분단'문제까지 없�면 금상첨화겠지요. 저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03 3번이 '우리 안'의 현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직접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주제라면, 한반도(남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역동적 움직임만을 엮어내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 선행들도 언급했듯이 '한국사의 배경'으로서만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정도의 국제인식으로는 분단을 극복할 주체의 형성이 요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중고교생에게 역사과목은 암기과목입니다. 그리고 역사과목 자체가 압박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힘, 또는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며 정책선택을 해야할까요?

두서없이 언급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선택하여 적절히 답변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사업으로 꾸릴 수 있는 주제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02

'6-29 민주화 선언' 이라고요?

교과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발제]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조왕호 | 전 대일고등학교 교사,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분석 및 서술방향 연구진

[토론]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토론문

최종숙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토론문

배성호 |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민주화 운동 서술을 중심으로

조왕호

전 대일고등학교 교사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분석 및 서술방향 연구진

들어가는 말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 중에 고등학교 2종(미래엔, 해냄에듀)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이 ‘6·29 민주화 선언’으로 표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것이 교육부가 작성한 교과서 편수용어에 따른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시정을 요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6·29 선언은 직선제 개헌의 쟁취를 앞세워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의 민의에 전두환 정권이 굴복한 결과였다. 그렇지만 이를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명명할 경우에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던 독재 권력이 갑자기 민주화의 주체로 돌변하는 역사적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표현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사용되었다.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6종 중 2종(두산동아, 미래엔)을 제외한 4종에 사용되었고, 검정 통과된 2007 고등 한국사 교과서 6종, 2009 고등 한국사 교과서 8종에도 모두 ‘6·29 민주화 선언’으로 서술되었다. 중학교 역사의 경우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언제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의 편수용어가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은 채 ‘6·29 민주화 선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여 발표한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보고서(이하 2017 연구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편수용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 …… 민주화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항 주체로서의 시민의 힘보다는 정부 혹은 국가의 결단 혹은 시혜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용어라 할 수 있다.(초등 분석)
- ‘6월 민주항쟁의 성과 = 6·29 선언’으로 등치될 수 없다. 5·18 민주화 운동과 동격으로 6·29에 ‘민주화’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이다. (중등 분석)
- 모든 교과서에 ‘6·29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민주화를 가로막던 독재 권력을 갑자기 민주화의 주체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고등 분석)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편수용어는 수정되지 않았고, 앞에 언급한 고등 한국사 2종 이외의 교과서들은 편수 용어를 준수하여 집필해야 한다는 규정을 너무나 충실하게 따랐다. 이 문제는 교과서 집필과 검정 과정에서 집필자들이 더 신중하게 판단,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근현대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역사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사 교과서 나아가 역사 교육이 정치 권력 입김에 좌우되는 현상마저 빚어졌으며, 현장 교사의 요구와 판단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을 축소, 왜곡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급기야 친일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다행히도 박근혜가 탄핵, 파면된 이후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폐기되었고, 새롭게 만든 2015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되어 2020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교과서에는 ‘6·29 민주화 선언’과 같은 서술은 또 없을까? 앞에 언급한 2017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의 문제점은 의미 있게 수정, 반영되었을까?

본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 사회6-1(국정), 중등 역사2,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을 살펴보고, 그 적절성을 검토한 것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2017 연구보고서처럼 포괄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었지만, 발제자의 부족한 능력과 짧은 준비 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또한 발제자가 가진 교과서 PDF 파일이 교과서를 처음 발행할 당시에 만든 것이어서 현재는 수정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설피고 소략한 분석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에 앞서 교과서 집필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중·고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구분	성취기준	학습요소
초등 사회 6-1	[6사05-01]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
중등 역사2	[9역12-03]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제헌 헌법,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고등 한국사 6-1	[10한사04-04]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10한사04-06]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한·일 협정, 7·4 남북 공동 성명,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평화적 정권 교체, 지방 자치, 시민 사회의 성장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학습요소가 고등 한국사에서 크게 늘어나지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 민주화 운동 서술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큰 차이점이 없다. 성취기준만 놓고보면 초등사회 6-1과 중등 역사2는 ‘파악한다’와 ‘이해한다’ 정도의 차이 밖에는 없어 보인다. 교육과정에 중등 역사2의 근현대사 부분은 주제사로 서술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취기준이 상대적으로 간략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중등 역사2의 어떤 교과서도 초등이나 고등과 구별되는 주제사의 형태로 서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 사회가 주제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학교급별로 교과서의 서술 분량도 비교해 보았다. 각 민주화 운동에서 순수하게 배경→ 전개→의의로 이어지는 본문이 포함된 쪽수만을 헤아린 것이다. 글자 크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초등 사회6-1에 비하여 중등 역사2의 서술 분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고등 한국사는 쪽수는 적을지 몰라도 실제 서술 분량은 대부분 초등 사회6-1보다는 많은 편이다.

구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초등사회 6-1 (국정)	6쪽 중 6쪽	6쪽 중 4쪽	6쪽 중 4쪽
중등 역사2 (검정 6종)	대부분 교과서가 1쪽 이내에서 서술		
고등 한국사 (검정 8종)	2~4쪽	대부분 교과서가 2쪽	대부분 교과서가 2쪽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 분량 비교

중등 역사2의 서술이 적은 것은 우선 해당 주제(성취기준)에 배당된 분량이 6~8쪽으로 초등 사회6-1보다 훨씬 적은 데 원인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등 역사2 교과서들이 본문 서술을 충실하게 하기보다 각종 보충 자료, 참고 자료에 큰 비중을 둔 측면도 있다. 내용의 충실성보다 교과서의 외형적 비주얼을 잘 갖추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의 채택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한다.

1. 초등 사회 6-1의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 운동을 어느 정도 깊이로 서술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필자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서술을 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는 있었다. 초등 사회6-1의 민주화 운동 서술은 성취기준에 제시된 주제가 선명하고, 교과서에 충분한 서술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는데 유리하였다. 그러나 발제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다.

4·19 혁명

본문에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 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 나갔다.’라고 서술하였는데, 정작 독재 정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서술은 없다. 개헌 과정의 불법성, 폭력성에 대한 설명이 없이 두 차례 헌법을 바꿔 장기집권을 했다고 서술하면 장기집권이 헌법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3·15 부정선거가 4월 혁명에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교과서 2/3쪽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지 사진과 삽화, 말풍선을 이용해 보충자료를 구성한 것은 과도해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2/3쪽이나 되는 공간에 3·15 부정 선거를 가지고 보충 자료를 만든 것

을 보면서 집필자들의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을 이용해 교과서의 보충 자료나 참고 자료를 만드는 방식의 구성은 교과서 집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차라리 그 공간에 이승만 독재 정치의 실상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다. 아울러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일지 몰라도 혁명이 무엇인지, 왜 ‘혁명’이라고 하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라고 낱말의 뜻풀이를 해 놓았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다.

4·19 혁명의 본문 서술은 중등 역사2나 고등 한국사도 마찬가지지만 전개 과정이 위주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대구 2·28 학생 시위를 최초의 학생운동 운운하며 굳이 특정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부정선거를 추진하자 대구, 대전 등지에서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선거일 당일에는 마산에서~~’ 정도로 서술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강조하다 보니 대구 시위와 마산 시위 서술 분량이 4·19 혁명 전체 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부정 선거 규탄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정권 타도 운동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교과서 서술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승만 스스로 물러난 것이 된다.

일면 당연해 보이는 서술도 문제가 많이 있다. 아래 문장을 보자.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고’라는 서술은 오류이다. 진압된 시위가 어떻게 더욱 거세졌는가? 시위는 진압된 적이 없다. ‘진압’이라는 표현도 모호하다. 민주화 운동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무장의 국민을 향해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총격을 가하여 학살했는데 그것을 무력 진압이라는 모호한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초등 교과서일지라도 경찰의 총격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집필자들이 상투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시민과 학생’ 또는 ‘시민들과 학생들’, ‘시민과 학생들’을 섞어서 썼는데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니라 ‘많은 시민과 학생’이라고 써야 한다. 서술 순서도 ‘학생과 시민’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전에 ‘4·19 학생 의거’라는 명칭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혁명에서 앞장선 것은 ‘학생’ 특히

중고생이었다.

혁명의 전개 과정이 마치 4월 19일에 마무리된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서술하였다. 이 정도 서술 분량이라면 최소한 이승만 하야 날짜 정도는 표기하고,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음을 명확히 드러내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

전반적으로 본문 서술이나 구성면에서 안정적이지만 다음 서술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 이즈음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18쪽)
- ㉡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 ㉢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했다.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은 자칫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엄군을 보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계엄군은 이미 5월 18일 새벽(2시 30분 경)에 전남대와 조선대에 진압하였다. 또한 계엄군이 시위 학생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 시위를 대규모 시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은 교과서 서술에서 지양해야 할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도 서술 공간이 충분한데, 계엄군이 자행한 학살을 ‘강제 진압’, ‘희생’이란 어휘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 ㉢은 맞는 내용이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군인’ 뒤에 숨어있는 느낌이다. ‘계엄군’과 ‘군인’이라는 용어가 같은 쪽에 함께 등장하는 것은 학생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많다.

5·18 민주화 운동을 서술할 때는 신군부 세력이 왜 무고한 광주 시민을 마치 적군을 다루듯 학살하고 폭력을 가했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신군부의 폭력성을 은폐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 또한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중, 고등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6월 민주 항쟁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6월 민주 항쟁, 1987년). 결국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일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6·29 민주화 선언, 1987년).

초·중·고 교과서를 막론하고 6월 민주 항쟁과 6·29 선언을 ‘결국’이란 접속어로 연결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서술은 6월 민주 항쟁의 대미를 6·29 선언이 장식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위 본문 서술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굴복하였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더욱이 본문 아래 2/3쪽 분량으로 ‘6·29 민주화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아래)’라는 보충 자료를 구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6월 민주 항쟁에서 6·29선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에 언급한 대로 민주화를 억압하던 독재 권력을 민주화의 주체로 둔갑시키는 느낌, 정부 혹은 국가의 결단 혹은 시혜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교과서 속으로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 자치제 시행,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실천해 나갔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중요해.

응, 국민의 힘을 보여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 같아.

뉴스를 보고 국민도 정부가 하는 일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해.

우리 지역에서 생긴 문제는 정부보다는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어.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더 잘 결정할 수 있어.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야 해요.

2. 중등 역사2의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등 역사2는 근현대사를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주제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주제 단원의 교과서 서술 분량은 6~8쪽인데, 순수하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서술 부분만 보면 1쪽 또는 1쪽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6-1보다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서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제사로 쓰도록 규정한 교육과정의 의도가 거의 수용되지 않았고, 서술 분량만 적은 뿐 통사 체제의 고등 한국사와 별 차이점이 없이 축약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개인적으로 중등 역사2의 근현대사 부분이 주제사로 규정되면서 기존 교과서의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내러티브가 등장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집필자들이 주제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본문의 서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배경→전개→의의 형식으로 짧게 서술하다 보니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치사적 변화를 각개 전투식으로 서술하다 보니 민주화 운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의 서술 공간(6~8쪽)을 더 늘릴 수가 없다면 뭔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 성취기준에 제시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제 전체를 묶어주기도 하고 맥락을 풀어가기도 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학습요소에 제시된 민주화 운동이 각각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독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맞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의 이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민주화 운동과 대척점에 있는 독재 정치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만 드러낼 수 있으면 민주화 운동의 의미나 지향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독재 정치의 폐해가 어떻게 남아있는지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학교 차원에서 독재 정치의 폐해를 좁은 서술 공간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초등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했다는 내용을 위주로 독재 정치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다. 대부분 개헌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지만 자칫 장기집권이 헌법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뿐만 아니라 3선 개헌과 유신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개헌을 강조하다 보니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설명이 4·19 혁명 서술 분량과 비슷한 교과서도 있었다.

중등 역사2의 민주화 운동 서술은 꼼꼼히 살펴보면 맥락이 어색하거나 서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이를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별히 눈에 띄는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몇몇 부분의 서술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가해자 내지는 권력을 잡은 자의 논리(명분)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서술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할 수도 있다. 아래 인용된 내용을 보면 굳이 '이유', '구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교과서에 서술할 내용은 사실이지 내세운 구실이 아니다. 이 내용은 2017년 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지적하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고등 한국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술한 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 시정되었는데, 중등 역사2에는 절반의 교과서에 그대로 서술되었다.

- ㉠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은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5·16 군사 정변).
- ㉡ 박정희가 이끄는 일부 군인 세력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1961).
-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장면 내각 때 나타난 사회 혼란을 구실로**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5·16 군사 정변, 1961).
- ㉣ 이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 지속적인 경제 성장,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 체제 마련을 구실로**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1972).

② 문장을 압축해 쓰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써야 한다. ㉤은 무성의하다. 1980년 5월 18일로 날짜를 특정한 것도 무리가 있지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과 시민이 희생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의 초등 분석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신군부의 폭력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은 초등 교과서의 오류와 같은 유형이다.

- ㉤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계엄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 ㉥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계엄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③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요소는 객관적 사실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가령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악화된 국제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맥락적으로 설명해 주는 서술이 바람직하다. ㉦에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가 왜 장기집권을 준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대통령 간접 선거로 헌법을 바꾸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헌법을 고친 후,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 ㉨ 이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 ㉩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은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준비하였다.

④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6월 민주 항쟁의 결과가 '6·29 민주화 선언'이고 이를 통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읽히는 서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결국'이라는 접속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의 현행 헌법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독재 권력으로부터 쟁취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직선제 개헌이 마치 정권이 시혜를 베푸는 느낌을 주는 서술은 지양해야 한다.

㉭의 밑줄 부분은 현재는 시정되었을 것이라고 믿지만 집필과 검정 과정의 무성의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해 둔다.

- ㉭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6월 민주 항쟁, 1987).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 ㉮ 결국 6월 29일 당시 대통령 후보이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였다(6·29 민주화 선언).

㉠ 결국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로 개헌을 거부하고 시위를 탄압하였다(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3. 고등 한국사의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

2015 고등 한국사의 서술은 2017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2009개정 교과서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우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노력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초등 사회6-10이나 중등 역사2의 민주화 운동 서술 분석에서 지적한 내용이 고등 한국사에서도 여전히 답습된 측면이 있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서술한 두 사례를 비교해 보자. ㉠은 신군부와 계엄군의 모든 행위를 무차별적 진압, 과잉진압, 무력 진압 등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은 무차별 폭력, 발포, 총격, 무자비한 학살 등으로 표현하였다. ‘진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신군부의 폭력성을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진압’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계엄군은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수백 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 그러나 계엄군은 5월 27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전남 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하였다.

㉡ 신군부는 공수 부대까지 동원하여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거 잡아들였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광주 인근 지역에서도 계엄군이 무고한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면서 시민군이 모여 있던 전남 도청을 장악하였다(5.27).

가해자나 권력자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서술도 아직 남아있다. ㉠, ㉡은 현재 교과서에 있는 서술이고 ㉢은 ㉡의 내용을 토대로 발제자가 재구성해 본 서술이다. 내세운 명분이 아니라 박정희의 의도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을 명분으로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

㉢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후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 유신 헌법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박정희의 종신 집권과 절대 권력을 추구한 것이었다.
(※ 이다음에 절대 권력과 종신 집권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헌법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서술)

이 밖에도 중등 분석에서 제기한 내용과 비슷한 유형으로 몇 가지 더 지적할 만한 것이 있지만 생략하고, 고등학교 민주화 운동 서술에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제시한다.

㉠ 4·19 혁명의 원인(배경)이 3·15 부정선거에만 있는 것처럼 서술해서는 안 된다. 일부 교과서에는 ㉠과 같이 4·19 혁명 단원에서 3·15 부정선거만을 언급하면서 서술했는데, 앞 단원에서 이승만 독재 체제를 설명했다라도 이를 맥락을 잡아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조). 왜 권력을 잡기 위해 부정 선거를 대대적으로 저질렀는지 설 명해야 한다.

㉠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자유당은 고령의 이승만이 당선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3·15 부정 선거).

㉔ 대통령 이승만의 반공 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자 민심은 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다가오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저질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85세 고령의 이승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 하였다.

㉕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서 중등 역사2라면 몰라도 최소한 고등 한국사에서 는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㉑, ㉒은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이 반공주의를 이용해 시위를 억압하려고 한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 서술되었다. ㉓, ㉔은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짓인데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 서술이 없다. 4·19 혁명에서 ㉑, ㉒을 썼다면,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당연히 ㉓, ㉔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 중에 당시 보도를 국민 앞에 반성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 ㉑ 이승만 정부는 공산당이 마산 시위를 조종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㉒ 정부는 공산주의세력이 시위를 조종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 ㉓ 언론을 통제하며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갔고
- ㉔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받은 언론들은 '광주에서 불순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㉖ 부마 민주 항쟁은 편수 용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만큼 홀대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용어도 통일이 안 되어 교과서에 따라 부마 민주 항쟁, 부마 항쟁, 부마 민주화 운동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주화 운동 서술에서 부마 민주 항쟁이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마 민주 항쟁은 시위 규모로만 따지면 5·18 민주화 운동 못지않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박정희 유신독재가 무너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유신 체제 붕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발제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운동이 유신 독재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일부 교과서를 제외하면 2009 한국사에 비해서는 서술이 늘어났다. 부마 민주 항쟁을 설명할 때는 최소한 학생과 시민, 노동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은 서술해야 한다.

유일하게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다'라고 소제목으로 붙이고, 그 아래에서 유신 체제의 붕괴를 설명한 것(미래엔)과 하단 보충자료를 구성한 것(동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은 유신 독재의 실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정권을 비난했다고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이야말로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 아닐까?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내용을 빼고 아래처럼 'YH 무역 사건 등을 계기로'라고만 서술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시위가 전국적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서술은 오류이다.

1979년 YH 무역 사건 등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 창원 일대에서는 대규모 유신 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부·마 민주화 운동),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㉗ 5·18 민주화 운동을 서술할 때 신군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정확한 서술도 중요하지만,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드높은 시민 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사실을 왜곡하려는 무리들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나중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 하나를 제외하고는 자발적 치안 유지와 무기 회수, 시민 대책 수립위원회 구성 등을 본문에 서술하였다. 당시 광주의 시민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본문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 자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술 공간 확보가 관건이다. 2개 교과서가 보충 자료를 구성했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시한다.

지역사 탐방 1980년 5월 시민 자치 공동체를 만들다

광주광역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 광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받은 언론들은 "광주가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온갖 유언비어가 확산되었지만, 정작 광주는 시민군이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시민은 높은 시민 정신과 도덕성을 보여 주었다. 행정과 치안의 공백 상태에서 광주 시내 은행 및 금융 기관에서 금고 등이 약탈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부녀자들은 시민군에게 주먹밥과 물을 나누어 주었다. 또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 수호 범시민 켈기 대회를 열어 평화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자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광주광역시는 1997년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조성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 국립 5·18 민주 묘지(광주 북구)

누리집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 광주 문화관광 - 오매광주



자료 시시백과 시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준 5월의 광주

‘혈액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시민군의 가두 방송으로 알게 된 시민들이 헌혈을 자원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 병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혈액을 보유하게 되었고 보관할 냉장고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 전남대학교 병원
‘5·18 10일간의 아전 병원’ -

5월 21일 오후, 시민의 공세에 밀려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물러났다. 그 후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진입하기까지 광주는 공권력의 공백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시민은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 주었다.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고, 식량과 물자가 부족하여도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항쟁하는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고, 주유소에서는 공짜로 기름을 제공하였다. 많은 시민은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헌혈에 참여하여 병원마다 대기 행렬이 500m 이상 이어지기도 하였다. 일부 시민은 무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나 강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청 앞 광장에서는 날마다 시민 쫓기 대회가 열려 평화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계엄군이 언제 다시 진입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광주 시민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5월 광주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민 공동체였다.



▶ 시민군에게 음식을 주는 광주 시민



▶ 헌혈을 하는 광주 시민

맺음말

초·중·고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내용이나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중등 역사2와 고등 한국사는 본문 서술만 보면 분량의 차이 또는 내용 요소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다소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내러티브는 거의 동일하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충자료나 심화자료를 구성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좀 과장한다면 고등학생이 중등 역사2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점수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중등 역사의 근현대사를 주제사로 쓰도록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무의미하였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초·중·고를 올라가면서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배우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집필자들에게만 맡겨 둘 일은 아니고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서, 정 필요하다면 집필 기준에서라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틀을 깨지 않고는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기 어렵다.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각 수준에 맞는 내러티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 한국사는 2009 때에 비하여 교과서의 기준 쪽수가 크게 줄었

다(384→328). 집필에 기본 지침이 되는 성취기준의 수도 전근대사가 17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38개에서 26개로 줄었다. 이로 인해 근현대사 부분의 서술 공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과서 본문의 서술 방식을 보면 기존 교과서와 별 차이가 없고, 늘어난 공간은 주로 학생의 활동 요소로 채워졌다. 활동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기존 교과서와 별 차이가 없이 여전히 사실 나열 위주의 서술이 많다. 세간에서 국사는 암기 과목 운운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역사 교사의 수업 방식은 나날이 진화해 가는데, 교과서의 내러티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집필자들이 사실 나열에 치중하지 않고 역사적 인과 관계를 맥락을 잡아서 풀어가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자면 서술해야 할 본문의 분량이 크게 늘어나고, 집필 기간도 오래 걸린다. 교과서가 두꺼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체 쪽수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독재 정치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대사의 서술 분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현대사 서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해야 할 역사도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서술 분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과서는 대부분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나 2007 한국사 교과서에 비해 소략한 편이다. 특히 독재 정치에 대한 서술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천편일률적이다. 이승만은 발취개헌, 사사오입개헌, 진보당 사건(조봉암 사형 집행), 국보법 개정과 경향신문 폐간이 공통적으로 서술된다. 박정희에 대한 서술은 5·16 군사 정변,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3선 개헌으로 서술하고 유신 체제로 넘어간다. 5·16 군사 정변의 반혁명성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교과서는 없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 정치의 공통분모를 유추하기도 어렵다. 독재 서술에 포함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 폭력과 인권 탄압, 그 바탕이 된 극단적 반공주의, 각종 특권과 특혜, 개인 우상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대체로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민주화 운동 서술도 배경과 전개 과정, 의의를 제대로 서술하는 게 중요하지만, 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사 서술에서 아직도 집필자들이 자유롭게 못하다는 점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이제까지 여러 외압이 작용하였고, 출판사는 집필자들 위촉된 마음에 자기 검열에 나선 경우도 많다. 교과서 수정 요구를 접하면서 검정 심사를 맡은 교육과정평가원은 수구 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검정에 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령 검정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서술한 경우 ‘학살’이란 용어 사용의 자제를 요구하였다. 집필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 피해가기도 하였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헌법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아니라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간섭은 일체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집필 기간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7월 27일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박근혜 파면 이후 무려 14개월만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본 제출일이 2019년 4월 2일이었으니 인쇄 기간을 제하면 집필 기간은 8개월도 채 안 된다. 체제 구성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제하면 교사들의 실질적 집필 기간은 6개월여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대다수가 교사이다. 교사가 학교 수업과 수업 준비, 담임과 각종 행정 업무에 시달리며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배려해주는 학교는 아주 드물다고 봐야 한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길 바란다. 교과서 집필 기간은 최소 3학기는 보장해야 한다. 겨울 방학을 두 번 거치는 시기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일정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2025년에 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된다면 늦어도 내년(2022년)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교과서 집필이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집필 기간 1년 반, 검정과 학교 현장 채택 기간 1년을 확보할 수 있다.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토론회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의 초중고교 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는 2015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어 2020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에 6·29'민주화'선언이 6월항쟁과 동급으로 혹은 보다 더 중요한 사건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한다. 6월항쟁은 독재에 맞선 항쟁이었고 6·29선언은 그 독재정권이 항쟁에 굴복하여 나온 일종의 '항복'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역사'왜곡'이라고 볼 근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포털사이트들을 검색해 보면 여러 '백과사전'에도 6·29'민주화'선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 서술된 사례는 단지 6·29'민주화'선언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교과서는 이념전쟁에 좌우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전쟁'이 펼쳐지는 한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영역임에 틀림없다. 조왕호 선생님의 발표문은 초등 사회6-1(국정), 중등 역사2,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6·29 '민주화' 선언과 같은 문제는 또 없는지 짚어보고 있다.

발표문을 보면 이글이 매우 디테일한 지점에 포커스가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해석, 뉘앙스,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 등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문장의 의미를 면밀히 살피고 예를 들면, 4월혁명에 대구, 마산시위분량이 너무 많다는 점, 부마항쟁에 대한 서술이 별로 없다는 점, 5·18 서술에서 신군부의 폭력성이 은폐되거나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 6월항쟁 서술이 6·29선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민주화가 독재권력의 '결

단' 혹은 '시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은 인상을 남긴 부분들, 가해자가 제시한 논리나 명분 중심으로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있다. 또한 부사 사용, '진압'과 같은 중립적 단어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충실한 역사서술을 위해 현대사 분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 교과서 집필과정에 외압이 없어야 한다는 점, 집필자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교과서 집필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 교과서 집필 과정을 둘러싼 환경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 문장들을 비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을 발표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발표문은 교과서 내용 특히 문장과 단어 수준의 매우 디테일한 지점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분석의 결과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걸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그것을 가르는 원칙은 무엇인가? 아쉽게도 이 발표문에는 그러한 원칙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독자는 그 원칙을 행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발표자의 지적은 대부분 상식적 수준, 즉 사회적으로 두터운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부합한다. 그러나 몇몇 부분은 머리를 가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에는 어김없이 발표자가 그리고 있는 역사교과서 집필 원칙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진다.

예를 들면, 독재가 옳지 않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화운동이 무조건 옳았는 가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공적이 훼손되어서는 안되지만 문제점이 숨겨져서도 안 된다. 그런데 발표문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금은 경직된 관점이 느껴진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과 대척점에 있는 독재정치"(6쪽).

또한 35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는 계속해서 재검토되고 재해석되고 있다. 특히 운동 주체의 문제는 매우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것은 민주화된 이후 다양한 소수자운동이 역사 다시쓰기를 하면서 과거 역사서술속에 가려졌던 주체들로 재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발표문에는 그러한 지점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일례로, 4월혁명에 대한 서술에서, "혁명의 주체를 ... 서술 순서도 '학생과 시민'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어디까지나 혁명에서 앞장선 것은 '학생' 특히 중고생이었다."(4쪽)는 주장은 '4월혁명의 핵심주체= 학생'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근 들어 4월혁명의 주체로서 고학생, 구두땀이와 같은 도시하층민, 여학생, 할머니 등의 기층여성 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학생'과 '시민' 그리고 그들간의 선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학생', '도시하층민', '여성',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드러내는 것이 좀더 현재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발표문에는 장기집권 수단으로 개헌과 선거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서술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했다는 내용을 위주로 독재 정치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다. 대부분 개헌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지만 자칫 장기집권이 헌법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다. ... 개헌을 강조하다 보니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설명이 4·19 혁명 서술 분량과 맞먹는 경우도 있었다."(6쪽) 발표자의 의도는 개헌설명만 장황하게 이루어지고 그밖의 독재정치의 다른 내용들이 많이 다루이지 않았음을 말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지적이 독재정권에게 헌법과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왜 한국의 독재정권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며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쿠데타로 집권에 이른 군부정권들마저도 개헌이나 선거승리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밟고자 했다. 정권의 정당성이 허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 승인을 통해 그 허약성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다. 개헌국면이나 선거국면이 되면 개헌이나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독재정권의 회유책이 등장하고 국민에 대한 선전선동도 강화되며 그 틈새에 야당의 발언력이 강해진다든가 운동단체들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그렇기에 많은 대규모 항쟁들은 개헌이나 선거국면에서 촉발됐다.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기계적으로 개헌과 부정선거를 나열하는 것은 문제지만 민주주의 수단으로서 헌법과 선거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것이 독재정권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어 활용되었는지 때때로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저항의 도화선으로 기여했는지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서술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초, 중, 고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서술의 내용이나 구성이 거의 비슷해서 고등학생이 중등 역사2 교과서를 보고 공부해도 될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인의 생각에도 교과서의 기본 관점은 동일하게 두더라도 중등이나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좀더 풍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켄리들을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때로는 민주화운동 내의

문제점이나 쟁점들을 제시하여 오늘날의 상황과 연관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중고로 진학할수록 교과서 내용은 어떻게 확장되고 정교화되어야 할까? 발표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중·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방향에 대한 모색' 토론회

배성호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교과서 논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 매우 중차대하다. 하지만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논란은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교과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긴급 토론회가 열린 것은 뜻깊은 일이다. 토론자는 조왕호 선생님 발표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잘못된 역사 서술과 용어 사용은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보고서(이하 2017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편수용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 …… 민주화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항 주체로서의 시민의 힘보다는 정부 혹은 국가의 결단 혹은 시혜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용어라 할 수 있다.(초등 분석)
- '6월 민주항쟁의 성과 = 6·29 선언'으로 등치될 수 없다. 5·18 민주화 운동과 동격으로 6·29에 '민주화'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이다. (중등 분석)
- 모든 교과서에 '6·29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민주화를 가로막던 독재 권력을 갑자기 민주화의 주체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고등 분석)

하지만 제대로 된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0월,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교과서 편수 용어 '6·29 민주화 선언'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이 공론화되었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개선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 11월 2일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현행 2015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수자료에는 '6·29 민주화 선언'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편수자료는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오고 있다"면서 "해당 용어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수자료를 편찬하면서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뒤로만 미룰 일은 아니다. 당장 초등 사회 검정교과서(5~6학년)가 내년 심사를 거쳐 2023년에 새롭게 여러 종으로 펼쳐 나올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현재 제시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반영하여 새롭게 펼쳐내는 2023년 초등 사회교과서에서는 문제를 되풀이하길 않길 바란다.

셋째, 교과서 심사 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대표적 경우가 바로 교과서 심사 과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집필자, 편집자, 출판사는 검정 심사 통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편수 용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편수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스란히 문제가 확대 재생산된다. 전 세계 교육적 동향에 맞춰 획일화된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재단하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 자율 교과서로 전환을 준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사 제도가 다양한 교과서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다가서야 한다. 또한, 편수 용어 역시 생각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안이 아니라 학생들과 다채로운 학습을 열어갈 수 있는 바탕으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시적인 교과서 서술 방향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

교과서는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열어가는 마중물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왕호 선생님의 발표처럼 민주화 운동 서술에 따른 초, 중, 고 교과서 서술은 여러모로 틀어볼 점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정례화되고 안착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열어온 교과서 분석 및 대안 모색 공론장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과서 개정 시기에 맞춰 초기에 사회 교과서에서 지금은 전 과목의 교과서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교과서 집필진, 연구진, 편집자 등과 함께 인권친화적 교과서 토론회를 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어가는 토론회와 보고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며 교과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2017년 연구보고서를 만든 사례를 지속적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다. 당장 2023년 새롭게 펼쳐나올 초등 검정

교과서 속 '민주화운동' 서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 교과서 서술과 이미지 텍스트 분석 나아가 교육과정 논의까지 풀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 긴급 토론회가 일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갈 출발점으로 자리하길 바란다!

